

#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조희연

##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시각

“반독재민주화운동(민중운동)은 6월 민주항쟁을 낳고, 6월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을 낳았다.” 반독재민주화운동(민중운동), 6월 민주항쟁, 시민운동의 이런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60~70년대부터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반독재민주화운동은 70년대 후반부터 민중운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하게 된다)은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국민적 투쟁을 선도하여 군부독재 체제를 퇴진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운동이 탄생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민중운동은 6월 민주항쟁의 원인으로서 시민운동은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이 명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필자는 그것을 좀더 복합적인 명제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심화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하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민주항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운동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이념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여기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명백하게 이런 입장이 분립되어 제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인식의 경향을 정리하면 이런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첫째 시민운동은 민주항쟁의 ‘결과’라고 하

는 시각,<sup>1</sup> 둘째 시민운동은 이미 민주항쟁의 구성적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시각이다. 전자에 따르면 민주항쟁이 과거의 파시즘적 독재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활동 공간이 존재하게 됐고, 시민운동은 바로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전개되는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서 출현하게 됐다는 것이다. 후자에 따르면 민주항쟁 자체가 이미 80년대 전반기의 급진적인 선도투쟁을 지양하면서 대중적인 민주주의제—직선제 등—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 투쟁으로 전개됐다는 것이다.<sup>2</sup>

이후의 논의 속에서 필자는 두 견해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전자의 견해는 6월 민주항쟁의 시민운동에 대한 영향의 이중성 중 한 쪽 측면만을 지적하고 있으며, 후자의 견해도 6월 민주항쟁의 이중적인 성격 중 역시 한쪽 측면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1 다음에 실린 견해가 이런 시각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조희연,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론」,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2 이 입장은 정식화된 견해는 아니며 필자가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정식화하기 위하여 ‘이념형’ 적으로 구성한 견해이다.

3 정치적·사회적 세력 및 인식의 경향을 유형화한다면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나눌 수 있다. 50년대의 극우반공주의 체제에서는 극우보수주의적인 정치적·사회적 세력만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는 이용화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진보주의는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 비합법적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60년대 이후 개발독재 체제에서 ‘어용적’ 자유주의는 50년대와 같이 극우반공주의에 포섭된 상태로 존재하나, 이제 자유주의의 일정 분파가 저항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70년대 교회 및 반독재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70~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저항적 자유주의(정치세력 및 사회세력)와 새롭게 출현한—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저항적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모두 ‘전투적’ 저항을 하게 되며, 저항적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모두 급진화하게 된다. 이 시기에 독재 체제에 전투적으로 저항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도성 아래 저항적 자유주의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것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던 것이다. 87년 이후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분립, 혹은 자유주의의 진보주의로부터의 독자화로 나타난다. 자유주의의 진보주의로부터의 분립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유주의’ 적 지향을 갖는 시민운동의 출현으로도 나타나고, 전투적 재야세력에 포함됐던 양김 씨를 포함한 제도정치세력들이 제도정치권에 복귀하여 권력집단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조희연, 『한국의 정치사회적 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총론』,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2002. 9. 28, 연세대 위당관;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의 정치변동』, 당대, 1998, 3장 5절).

## 6월 민주항쟁의 '성격의 이중성' 과 시민운동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필자는 시민운동을 그 이념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하고,<sup>3</sup> 그 활동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조건에서 그 조건들을 활용하면서 전개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반체제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조건 및 민주주의적 조건이 확보되고 전제될 때 성립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시민적·정치적 조건이나 그것을 포함하는 민주주의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른바 '시민사회'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한국에서 이런 시민사회는 서구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달리 특수한 경로를 밟았다. 한국 사회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같은 외생(外生)적 요인에 강제되면서 근대 사회 및 '민주주의공화국'으로의 길에 들어선 사회에서는, '법적·제도형식적 측면에서의 시민사회'와 '실질적 시민사회'가 괴리되게 된다. 법적·형식적 시민사회와 실질적 시민사회가 괴리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혹은 근대 사회 확립의 복합성이 지적될 수 있다.<sup>5</sup> 법적·형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헌법제정 및 남한 정부의 수립으로 주어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법적·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헌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때, 전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29년에, 프랑스에서는 1944년에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 데 반해, 한국에서 1948년에 주어지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서구에서 아래로부터의 참정권 투쟁을 통해 권리가 쟁취되어 온 것과는 달리, '후발 주자'로서의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의 역사적 쟁취물이 '위로부터' 법적·형식적으로 이식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법적·형식적 시민사회가 곧 실질적 시민사회로 동일시될 수 없다는 데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이 있다. 이처럼 법적·형식적으로 확립된 시민사회는 50

4 시민사회에 대한 국내의 논의에 대해서는 유평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 한울, 1995 참조.

5 신광영 교수는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시민사회를 구분하면서, 후자의 관점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법적·형식적 시민사회와 실질적 시민사회의 괴리는 아시아 시민사회 형성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평무·김호기 편, 앞의 책, 1995).

년대의 민간권위주의 정권과 60년대 이후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허구화되고 형식화되어갔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허구화시키고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무장해제하면서 시민사회의 대립항으로서의 국가를 강화했던 것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이런 억압은 시민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조직적 행위로 담보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 각종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보장됐지만, 이후 각종 법률 개악 및 현실에서의 억압을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허구화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다.

정작 법적·형식적 시민사회를 실질화하는 것, 또한 법적·형식적으로 보장된 각종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된 것은, 이런 시민사회의 허구화 및 사회운동의 억압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를 통해서였다. 그 단적인 예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성장이다. 60년대 이후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는 여러 영역과 차원에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되어갔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무소불능의 권력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되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며 이를 통해 '근대적인' 시민적 주체화가 이뤄져 갔던 것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바로 이런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정점을 상징하며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 및 시민적 주체화의 고양을 상징한다.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를 통하여 군부권위주의 국가권력을 퇴진시키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권력으로 전환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된 국민들과 주체화된 시민이 탄생했다.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은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는 근대적인 시민들의 탄생과정이었으며 실질적 시민사회의 탄생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87년 6월 항쟁은 단순히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 등 낮은 수준의 국민적 쟁점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시민' 혁명적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국민들이 이미 권위주의 정권에 굴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근대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주체화된 근대적 시민으로 탄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진정으로 '시민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시민혁명 과정에 동참한 시민이 신분제의 속박 아래 존재하는 신민(臣民)이지만 시민혁명 이후의 법제화를 통해서 근대적 시민으로 탄생하게 됐기 때문에 이미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은 실질적으로 이전의 신민이 아닌 근대적 시민으로 탄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은 실질적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근대적 시민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시민혁명'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은 단순히 시민적 요소를 강하게 내장한 시민혁명으로 환원될 수 없는 급진운동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은 60년대 이래 장기집권과 독재를 비판하는 낮은 수준의 운동에서 발전되어갔다. 그러나 70년대를 거치면서 한편에서는 제도정치권에서 축출된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재야' 운동으로, 나아가 기층민중들의 경제적 착취를 쟁점화하는 민중운동으로, 또한 80년대를 거치면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혁명적 전환을 추구하는 반파시즘적인 급진적 운동으로 발전되어갔다. 반독재민주화운동에는 온건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뿐만 아니라 급진사회주의자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이념과 인식들이 개인의 의식 속에서도 공존하고 있었다. 당시 민중운동은 투쟁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전투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이념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급진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는 이런 민중운동의 주도성이 일정하게 관철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직선제 개헌 등 낮은 수준의 국민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운동이었지만 거기에는 급진적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수립하려고 하는 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에서 단순한 민선민간 정부에서부터 혁명적 민주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이 제시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본다면 6월 민주항쟁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편에서 한국적인 '시민혁명' 적 성격과 다른 한편에서는 급진적인 민중항쟁의 성격이다. 시민혁명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6월 민주항쟁 속에는 시민(운동)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 시민운동의 기반이 되는 '근대적인 시민'의 탄생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중항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6월 민주항쟁은 시민사회적 요소로만 환원될 수 없는 초(超)시민사회적인 급진적 요소를 내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는 두 번째 시각은 주로 6월 민주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성격의 이중성에서 일면만을 지적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미 시민운동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견해는 일면 진실이

<sup>6</sup>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환에 대한 연구」, 유필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2001. 이 글에서는 그 이중성을 '성격의 이중성'과 '결과의 이중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고 일면은 한계를 갖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의 이중성' 과 시민운동의 '구성적 출현'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민주항쟁 자체의 성격도 보아야 하지만 민주항쟁이 어떻게 종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정착하게 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6월 민주항쟁은 민주항쟁의 '최소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서 항쟁을 종결시키고자 했던 군부 정권의 전략적 행위, 즉 6·29 선언에 의해서 종결된다. 나아가 이후 12월 대선에서 민주항쟁에서 연합해 있었던 여러 정치사회 분파들이 분열하면서(YS 및 DJ의 분열, 민중운동진영의 분열 등) 최종적으로는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합헌적' 재집권으로 나아가게 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주항쟁에는 급진화된 요소가 내재해 있었지만,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최소주의적 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6·29 선언은 바로 이런 최소주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항쟁 연합을 균열시키고 민주항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적 대응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6·29 선언에 의해 1차 민주항쟁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민주항쟁의 '1차 종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후 민주항쟁에서 연합했던 제도정치세력은 급진적 운동세력과 분리되면서 개헌 및 선거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들어서게 된다.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 양김 씨를 상경으로 하는 제도정치세력들은 분열하게 되고 급진적 운동세력들도 비판적 지지, 후보단일화, 민중후보 등으로 분열되면서, 결국 군부권위주의세력의 '합헌적' 재집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로써 6월 민주항쟁을 정점으로 하는 투쟁은 종결된다. 이를 민주항쟁의 '2차 종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싶다. 즉, 6월 민주항쟁은 성공이면서 실패라고 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과거의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퇴진시키고, 직선제에 의한 민선 정부를 도래시켜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도정에 한국 사회를 올려놓게 된다는 점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이후 시민운동을 포함한 각종 사회운동 및 개혁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舊)군부권위주의 정권을 '혁명적'으로 퇴진시켜 구 권위주의 정권 유산을 철저히 청산하는 식으로, 이를 통해 민주항쟁의

급진적 요소를 실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에는 민주진보세력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길과 구세력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이 각축하고 있었다면, 87년을 거치면서 6·29 선언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이 지배적인 경로로 정착하게 됐으며, 그 결과 구 권위주의세력 및 기독교세력이 제도적·비제도적 권력을 유지하는 속에서 민주개혁이 이뤄지는 경로로 나아간다.

이런 민주항쟁의 이중적 결과가 바로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 시민운동의 초기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민주항쟁이 그 '결과'로서도 시민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성공의 측면에서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년의 실행을 살아야 하는 '공포의 시기'였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존립할 수가 없었다. 수년의 실행을 감수하면서 저항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급진적인 민중운동으로 국한되어 있었다(사실 이것이 민중운동의 도덕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이런 성격의 시민운동을 가능케 한 조건은 민주항쟁이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직접적으로 퇴진 시킴으로 형성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은 그 실패의 측면에서 시민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시민운동은 비(非)민중운동 혹은 반(反)민중운동적 정체성을 띤 자신과 과거의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민중운동을 구별하면서 온건한 이념을 표방하고, 합법적·제도적 수단과 통로를 활용하는 운동으로, 나아가 계급계층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간층적 운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했다.<sup>7</sup> 이처럼 초기 시민운동의 정체성은 이전의 민중운동에 비해서 보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sup>8</sup> 이런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체성은, 6월 민주항쟁이 실패로 귀결하면서 보수언론을 포함한 구세력

7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앞의 책, 325~330쪽.

8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필자는 시민운동을 기존의 보수주의적—실제로는 '극우적'—관변단체나 진보적·급진적인 80년대 민중운동과는 구분되는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80년대까지의 민중운동이 급진적·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이 과거와는 다른 '보수화된 정체성'을 갖는다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들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의 도정으로 한국 사회가 이행하게 된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초기 시민운동세력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만들어내는 비(非)급진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보수언론은 이런 초기 시민운동의 비(非)민중운동적, 반(反)민중운동적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운동의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기성 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이 급진적·진보적 민중운동과 분립(分立)되고 그로부터 독자화한다는 점이다. 군부권위주의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와 결합된 채로 존재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출현은 반독재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합되어 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분립, 더 정확하게는 자유주의의 진보주의로부터의 분립과 독자화로 규정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 독재라고 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진보주의적이고 전투적인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진보주의적 운동과 구별되는 온건하고 제도 내적인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 자신을 정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분립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실패'라고 하는 결과에 의해 시민운동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뒀어야 할 것은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선협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외연과 그 정체성은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민중운동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사실 현재 시민운동이라고 포괄되는 개별 운동 형태들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해왔다.<sup>2</sup> 그러나 그것이 87년 이후의 지형 속에서 독특한 성격의 운동으로 부상했고, 어떤 점에서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갖는 시민운동으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시민운동인가, 시민운동에 포괄되는 운동은 어떤 형태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협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구성의 관점'<sup>3</sup>에서 볼 때 초기 시민운동은 80년대의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제도적 조건을 활용하면서 자유주의적 지향을 갖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구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

<sup>2</sup> 우리가 현재 시민운동이라고 범주화하는 단체들(예컨대 YMCA, 홍사단 등)은 이전 시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87년 이전에는 '탈(脫)정치화된 시민사회단체'로 존재했다. 그런 점에서 87년 이후에 경실련 등으로 상징되는 시민운동은 새롭게 '구성'된 사회운동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1).

다. 그리고 이런 구성 과정에는 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의 초기 추동 주체들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적 선택이 매개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공과 실패의 이중적 결과에 규정되면서 스스로를 비(非)민중운동적 ‘신’ 사회운동으로 ‘구성’ 하며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앞서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의 두 가지 시각 중 첫째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민운동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시민운동에는 ‘성공으로서의 결과’와 ‘실패로서의 결과’가 동시에 착종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앞서의 첫 번째 시각은 일면 타당하고, 일면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90년대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성화’와 시민운동의 다양화·다원화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회운동진영, 특별히 민중운동진영에서는 ‘패배’적 정서가 크게 존재했다. 87년 대선 이후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지배적인 경로로 정착하게 되면서 이런 패배적 정서는 87년 말과 88년 초에 강하게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경로가 민중운동 자신들의 분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양김의 분열에 기인한다고 하는 점에서 민중운동진영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더욱 증폭됐다. 과거 민중운동이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좌절 요인이 주로 외부적인 독재권력의 억압에서 주어졌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절을 맞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적 공황’ 같은 것마저 존재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운동의 재활성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좌절감이 팽배했던 상태를 벗어나,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역동성의 회복에는 여러가지 정치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의 재불안정화이다. ‘합헌적’인 방식으로 재집권함으로써 높은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향유할 것으로 보였던 노태우 정부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이것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권 과정의 허구성이 노

10 여기서 구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구성주의적 사회운동론(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 출판부, 2001, 93장)과 같은 특정한 사회운동론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민족주의와 같은 담론의 구성에서 보여지는 좀더 일반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칭한다(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정됨으로써, '변형된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재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6월 민주항쟁의 좌절을 낳은 6·29선언이 군부 정권의 전략적 시나리오에 의해 기획된 '정치적 쇼'라는 것이 폭로되고, 5공 청문회나 광주 청문회를 통해 집권층의 역사적 반민주성이 대중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노태우 정부에 대한 기대가 순식간에 분해됐다. 87년 이후 비록 지역주의에 의해 왜곡되기는 했지만 88년 4·26총선을 계기로 한 여소야대 국회의 출범은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화를 촉진시킨다. 이처럼 억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약화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주체화와 민주적 활성화의 증대이다. 87년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전환 이후,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순응과 굴종을 강요당했던 국민들이 개인의 차원에서 주체화(empowerment)될 뿐만 아니라 직업집단 및 계급계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거나 시민 사회단체를 조직하는 등 집단적으로 주체화되어갔다. 87년 이전에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방향에서 시민사회가 '저항' 적으로 활성화됐다고 하면, 87년 이후에는 스스로를 주체화시키는 방향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통해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현재에도 다양한 직업, 계층계급별로, 다양한 영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조직화시켜가고 있다. 이전에 관변단체가 압도했던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직업·계급·계층별 조합들과 결사체들이 생겨나고 정부와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발하는 시민·민중단체들이 확대되어 간 것도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일종의 직업별, 계층계급별 자각과 조직화가 진행됐던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활성화된 민주노조운동은 생산직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직과 전문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는 87년 이전에는 주로 독재정권 타도라는 '외재적인' 저항의 형태로 표출됐으나, 87년 이후에는 관변적 조합과 조직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 독립적 조직화의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의 이런 변화를 87년 이전의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에 대비되는 '민주적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심지어 공무원 노조의 결성같이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성화가 국가공무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민주

적 활성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적 활성화는 좌절된 민주항쟁의 에토스와 동력이 새로운 양상으로 부활함을 의미했다.

시민사회의 이런 변화는,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시민운동이 비(非)민중운동적인 보수적,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시민운동의 다양화와 다원화가 나타날 수 있게 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진보적 시민운동’, ‘민중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 초기의 보수적 정체성을 갖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출현, 초기의 보수적 정체성의 이완 등은 시민운동의 재구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시민운동의 재구성은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민중운동으로 복귀하거나 시민운동적 정체성의 해소라기보다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립구조를 지속하면서 시민운동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형태를 취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90년대는 한편에서 진보적·급진적 민중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발전과 다른 한편에서 시민운동의 다양화·다원화가 진행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사회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 상이한 역할을 하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권위주의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 및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기점으로 지배불력이든 저항불력이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이후 민주주의운동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구(舊)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전선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둘러싼 전선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내포적 의미 확장 및 민주주의의 확장적 실현을 둘러싼 전선이다.<sup>11</sup> 87년 이후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에 따라 이전의 권위주의세력들이 일정한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민주개혁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민주적 개혁의 제한적 시행을 지향하는 구세력과 민주적 개혁의 철저화를 지향하는 민주세력 사이에 투쟁이

---

11 이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민주주의로,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권리도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쟁취되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형식이나 제도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확장된 민주주의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층적인 계급적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2001).

전개된다. 시민운동은 큰 틀에서 보면 후자의 입장에 서서 민주적 개혁의 가속화와 철저화를 지향하며 싸우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민중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 충분히 의제화되지 않은 사항들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노동운동이 투쟁하는 쟁점들은 기본적으로 6월 민주항쟁에서 명확한 형태로 의제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확장적·진보적 해석에는 내포되어 있는 의제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 민중운동은 6월 민주항쟁에서 명확히 정식화되지 않았던 쟁점들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확장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합법적이고 제도 내적인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고, 민중운동은 그런 합법성과 제도 내적 영역 자체의 확장을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성에 대한 6월 민주항쟁의 함의**

이 글은 “반독재민주화운동(민중운동)은 6월 민주항쟁을 낳고, 6월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을 낳았다”는 명제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복합적인 명제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해명해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민중운동은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이고, 시민운동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하나는 6월 민주항쟁이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을 쟁취함으로써 시민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줘 시민운동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미 민주항쟁 속에 시민(운동)적 요소가 구성적 일부로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먼저 6월 민주항쟁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급진적·전투적 지향을 갖는 민중운동이 6월 민주항쟁의 주도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민중항쟁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실질적 시민사회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번째 견해, 즉 시민운동이 6월 민주항쟁의 구성적 일부라는 견해는 일면 타당하고, 일면 한계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의 이중성’이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과의 관계를 이중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성공의 측면에서 보면 6월 민주항쟁은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운동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운동이 탄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의 성공이 시민운동에 작용하고 있으며, 실패의 측면에서 보면 시민운동이 초기에 비(非)민중운동적·보수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민주항쟁의 실패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을 보는 첫 번째 시각은 역시 일면 타당하고, 일면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성격의 이중성’과 ‘결과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좀더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6월 민주항쟁을 중단시켰던 6·29 선언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부패와 반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됨으로써, 또한 시민사회가 과거의 ‘저항적 활성화’와는 구별되는 ‘민주적 활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회복됨으로써,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시민운동의 보수적 정체성이 완화되고 시민운동의 다양화와 다원화가 증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계승의 관점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연대 및 동맹 모델<sup>12</sup>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6월 민주항쟁 자체가 민주항쟁과 시민혁명적 성격이 복합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때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인 민중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시민운동 간에 세계사적 동맹모델이 6월 민주항쟁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월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적 요소)가 급진적·진보적 요소와 결합된 채로 존재하면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에도 적용해 본다면, 진보적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90년대 초반의 시민운동의 보수적 정체성은 6월 민주항쟁 속에 존재하고 있던 급진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분리하고 대립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이 표방하는 시민적 요소는 이제 급

12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조희연, 「시민적 이슈와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적 관점: 일반 민주주의투쟁과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로, 2001.

진성을 부단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6월 민주항쟁의 실패가 규정하는 조건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성이 필요한 것은 6월 민주항쟁의 과제가 철저히 실현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 그 자체에서 연유한다. 시민운동이 6월 민주항쟁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월 민주항쟁의 남겨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두 운동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투적 민중운동(노동운동)과 대중적 시민운동 간의 정당한 연대가 증진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시민운동이 단순히 주어진 틀 내에서의 운동으로 안주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자본주의의 천민성 등 6월 민주항쟁이 개혁하고자 했던 유산들이 직간접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체제내화되고 관료화되면서 비(非)노동계급적 비판성과 역동성이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으로 출현하여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서구와 달리, 이런 현실적 조건은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화된 시민운동 간의 적극적인 연대의 모델이 개발되고 실현될 필요를 제기한다. 현실 지형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지 않고 시민운동이 전개될 때 그것은 체제의 합리화 운동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한국 사회의 철저한 민주개혁의 과제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의 사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향후 제3세계에서 실현해야 할 세계사적 동맹 모델을 한국에서부터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구별하는 선형적이고 실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은 시민적·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민중운동은 민중적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맥락과 저항의 대상에 따라서 상이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활동하게 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사회운동의 지배적 형태가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고, 이것이 심화되면서 스스로를 민중적 운동으로 자기정체화했던 것이다.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87년 이후 확장된 민주주의 조건 속에서 권력 감시와 민주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내적 운동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 시민운동은 자신을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대(對)민중운동적 정체성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이데올로기화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과 과도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 정치적 중립

성, 합리성, 대중성 등의 족쇄에 함몰되는 것은 시민운동의 진정한 자리 찾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 체제 (경제 체제 혹은 정치행정 체제)의 불완전성과 비합리성에 맞서서 그것을 인간화하고자 하는 저항적·자조적 행위의 조직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여러 형태 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운동이다. 민중운동은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이데올로기화된'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이 87년 6월 민주항쟁의 아들/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운동은 체제를 인간화해가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가질 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정당한 연대마저도 가로막히게 된다. 더구나 초기 시민운동의 맥락에서 구성된 정체성을 변화된 상황에서도 계속 고집하게 될 때, 시민운동의 활동 폭은 좁아지게 된다.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별종의 운동이 아니며, 민중운동은 민중적 사회운동에 대한 시민적 사회운동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럴 때 연대를 사고하는 인식의 장벽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민중항쟁적 성격과 시민혁명적 성격이 하나의 사건 속에 융해되어 있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

---

조희연 chohy@gmail.skhu.ac.kr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및 NGO학과 교수. 저서로는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외 다수.